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11.10.(화) 11월 2주차 (제26-56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정책) 美 하원 민주당, 제120대 의회 정책 방향 및 초기 100일 우선과제 발표 ····· 2
• (산업) 美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지속, 첨단산업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경제) 美 10월 근원 소비자물가 예상 상회, 12월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유지 ····· 10
• (수출통제) 美 상무부, '블랙리스트 기업 자회사 대상 수출통제' 시행 유예 연장 ····· 11
• (통관) 美 관세국경보호청, 외국 수입신고인 통관 요건 강화 ····· 12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입법) 특이 동향 없음 ····· 13
• (행사) WITA, Brookings, CSIS 행사 4건 ····· 13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4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5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11.12(목)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Weekly Jobless Claims)
11.13(금)	• 10월 생산자 물가지수(PPI)
11.16(월)	•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조사(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11.17(화)	• 10월 소매 판매(Retail Sales), 수입 가격(Import Prices)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정책) 美 하원 민주당, 제120대 의회 정책 방향 및 초기 100일 우선과제 발표

■ 美 하원 민주당, 생활비 완화·행정부 감독 강화·기본 가치 회복 등 3대 정책 방향 제시
■ 의료·복지 복원, 관세조치 철회 및 중동전쟁 중단 등 초기 100일 5대 과제 추진
■ 민주당 양원 다수에도 상원 의사진행 절차·대통령 거부권 등 입법상 제약 상존

1. 개 요

□ 美 하원 민주당, 제120대 의회 3대 정책 방향 및 초기 100일 우선과제 발표(11.4.)

-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하원 민주당 대표는 차기 의회 3대 정책 방향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행정부 책임성 강화 △미국 기본 가치 회복 제시**

  - **(생활비 부담 완화)** 주거·의료·식료품 및 생필품·에너지 요금·돌봄 등 5개 분야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과제 마련

  - **(행정부 책임성 강화)**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과 부당한 가격 인상 대응을 강화하고, 연방대법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연방의원 주식거래 금지 추진

  - **(미국의 기본 가치 회복)** 자유와 법 앞의 평등, 투표권 보장 및 이민 국가로의 정체성 등 미국의 기본 가치 회복 강조

- **제120대 의회 출범 초기 100일간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ACA 세액공제 연장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예산 복원 △관세조치 철회 △중동전쟁 중단 등 5대 과제 우선 추진 방침**

  - **(메디케이드 지원 복원)** 기존 지원 삭감 조치의 철회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장 축소 방지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 **(ACA 세액공제 연장)**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추가 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식품지원 복원)**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예산 삭감분 복원을 통해 저소득층 식품구매 부담 완화 및 식품지원 기능 회복

  - **(관세조치 철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조치 철회를 추진하고, 소비자물가 및 기업의 원자재·중간재 조달비용 부담 완화

  - **(중동전쟁 중단)** 중동전쟁 중단을 추진하고, 전쟁권한 관련 결의·입법 등 의회 차원의 견제 수단 활용 모색

2. 주요 내용

가.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초기 우선과제

□ (의료·복지) 메디케이드·영양지원프로그램 지원 복원 및 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 **'25년 예산조정법에 따른 메디케이드·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지원 축소 조치의 철회와 ACA 보험료 추가 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가계 의료·생활비 부담 완화 추진**

  - '25년 예산조정법(P.L. 119-21)에 따른 메디케이드 수급 요건 강화 및 연방 지원 축소 조치의 철회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 수준 회복 모색

  -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예산 삭감분 복원과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추가 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식품구매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美 의회예산국(CBO)은 '25년 예산조정법상 메디케이드 참여요건 및 SNAP 근로요건 강화로 '25~'34년 연방지출이 각각 약 3,256억 달러, 69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

□ (민생경제) 주거·의료·식료품·유류비·돌봄 등 5대 분야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의료·식료품·유류비·돌봄 등 기존 5개 분야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입법과제 구체화 추진**

  -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경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식료품·생필품 가격 안정 등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 모색

  - 유류비·공공요금 및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후속 입법방안 추진

□ (관세·통상) 기존 관세조치 철회 추진 및 의회 통상정책 견제 강화

- **민주당은 관세조치 철회를 통해 소비자 물가 및 기업 조달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하나, 행정부의 관세권한과 입법 절차 등으로 정책 전환에 제약 예상**

  - 기존 관세조치 철회를 초기 100일 우선과제로 제시했으나, 제232조·제301조 등 법률상 관세부과 권한 변경에는 양원 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필요

  - 관세정책 조정과 별개로 통관·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규제는 지속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품목별 관세 부담 및 북미 공급망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나. 행정부 책임성 강화

□ (행정부 감독) 하원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집행 감독 및 공직윤리 감독 강화

- **행정부의 예산·정책 집행 및 고위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고, 주요 행정조치의 적정성 점검 추진**

  - 하원 상임위원회는 별도 입법 없이 청문회·자료요구·소환장 등 감독 수단을 활용해 정책 집행 및 공직윤리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관세정책·정부계약·산업지원 등 경제통상 분야로 감독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연방기관·기업에 대한 조사 범위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정

□ (정치·사법개혁) 연방의원 주식거래 제한 및 연방대법원 제도개선 추진

- **연방의원의 주식거래 제한과 연방대법원 윤리제도 개선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 모색**

  - 연방의원의 개별주식 거래 금지를 통해 직무상 공정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공직윤리 강화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추진

  - 연방대법원 관련 윤리·운영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되, 구체적인 개혁 범위와 입법방식은 후속 논의 필요

다. 미국의 기본 가치 수호 및 안보정책

□ (민주주의) 투표권 및 기본권 보장과 이민 국가로의 가치 회복 강조

- **민주당은 투표권 보장과 법 앞의 평등, 시민적 자유 및 이민자 권리 보호를 미국의 기본 가치로 제시하고 정책 대응 방향 모색**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와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투표권 보장 및 민주주의 제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

  - 이민자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민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기존 이민정책에 대한 의회 대응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추진 일정은 미제시

□ (안보·전쟁권한) 중동전쟁 중단 및 군사 권한에 대한 의회 견제 강화

- **중동전쟁을 초기 100일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전쟁 권한 및 예산 심의 등을 통한 행정부 견제 강화 모색**

  - 전쟁권한 결의안·관련 입법 등을 통한 중동전쟁 견제를 추진하나,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 및 대통령 거부권 등 제도적 제약 상존

  * '26.7.23. 하원은 중동전쟁 중단 요구 결의안을 214대 208로 가결했으나, 9.24. 상원에서 49대 50으로 부결되며 양원 간 입장 차이 확인

  - 제프리스 대표는 중동전쟁에 따른 휘발유·경유·비료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중동전쟁 중단을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연계한 우선과제로 제시

〈美 하원 민주당 초기 100일 우선 입법과제 및 정책 현황〉

우선과제	주요 추진내용	현행 제도·정책 현황
메디케이드	의료지원 축소 조치 철회	'25년 예산조정법상 수급요건 강화·연방지원 축소
영양지원 프로그램	지원 예산 삭감분 복원	'25년 예산조정법상 근로요건 확대·비용분담 개편
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추가 세액공제 연장	추가 세액공제 '25년 말 종료(기본 세액공제 유지)
관세정책	행정부 관세조치 철회 추진	§232·§301 등 관세별 법적 근거·조정 절차 상이
중동전쟁	전쟁중단 추진	대통령 군사권한·의회 전쟁권한 관련 법률 적용

[자료: 미 하원 민주당 대표실('26.11.4.), 의회예산국(CBO), 의회조사국(CRS), P.L. 119-21 등 종합]

2. 현지 반응

□ 민주당의 정책 전환 추진에도 입법상 제약 및 기업 경영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의회) 민주당 내 정책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으며, 상원 의사진행 절차와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주요 입법과제 추진에 제약 예상**

- **(산업계) 기업들은 관세·에너지·원자재 비용 및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민주당 양원 확보에도 단기 비용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美 하원 민주당 공식 서한(11.4), 폴리티코(11.6), 로이터(11.4), Roll Call(11.5)

(산업) 美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지속, 첨단산업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

- ’25년 리쇼어링·FDI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발표 규모 약 24.7만 개 기록
- 컴퓨터·전자제품, 화학·의약품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
- 한국은 대미 제조업 리쇼어링 일자리 발표 규모에서 1위를 기록하며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1. 개 요

□ 美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25년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으로 약 24.7만 개 일자리 창출 추정

- **’25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과 FDI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 수(발표 기준)는 각각 152,734개와 94,329개로 집계**

- ’10년 이후 누적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280만 개를 넘어섰으며, 리쇼어링 및 FDI가 미국 제조업 고용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

- 이 중 약 180만 개가 실제 고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발표된 투자 계획이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추세

- **미국 제조업 투자는 공급망 안정성 및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확대**

- 공급망 교란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해외 생산 의존에 따른 위험이 부각되면서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 움직임 지속

- 관세 부담, 정부 인센티브 및 내수시장 접근성 등이 기업의 생산 거점 재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건으로 작용

- 특히 반도체, 배터리, 운송장비, 의약품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투자 확대

2. 주요 내용

□ 공급망 안정성 및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기술 집약적 제조업 투자 확대

- **미국은 해외 생산 의존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 투자를 확대**

- 반도체·전자제품은 첨단기술 경쟁력, 운송장비·전기장비는 제조 공급망 확충, 화학·의약품은 핵심 소재 및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전체 일자리 발표 규모의 81%가 첨단·중고위기술 제품 관련 분야에 집중되는 등 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 양상

〈'25년 미국 리쇼어링 주요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현황〉

순위	산업	일자리 수	비중
1	운송장비	48,786개	20%
2	컴퓨터·전자제품	44,877개	18%
3	화학·의약품	37,265개	15%
4	전기장비·가전·부품	36,188개	15%
5	기계류	22,946개	9%
6	의료기기·의료용품	11,097개	5%
7	금속가공제품	10,945개	4%
8	기타	30,017개	14%
합계	-	242,121개	100%

[자료: Reshoring Initiative]

□ 공급망 안정성 및 시장 접근성 확보가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 **기업들은 해외 생산 의존에 따른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주요 고객 및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를 추진**

- 현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부품 조달 및 생산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납기 단축 및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

- 숙련 인력 확보와 정부 인센티브, 미국 경제 기여 등도 생산 거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작용

- 관세 관련 투자 결정 요인 언급은 '24년 11건에서 '25년 146건으로 증가하며 관세가 리쇼어링 결정의 동기가 됐음

〈리쇼어링 결정 주요 요인〉

주요 요인	'24년	'25년
미국 내 공급망 생태계	151건	608건
고객·시장 근접성	315건	516건
숙련 인력 확보·교육	379건	472건
정부 인센티브	752건	469건
미국 경제 기여	246건	442건
공급망 중단 위험	249건	250건
인프라	119건	237건
관세	11건	146건

[자료: Reshoring Initiative]

□ 미국 남부 지역, 제조업 기반 및 투자 여건을 바탕으로 생산시설 유치 확대

• 미국 제조업 투자는 산업용 부지와 제조업 기반 등 생산시설 구축 여건이 갖춰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남부 지역은 제조업 투자 유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 등이 주요 투자 지역으로 부상

- 지역별 투자 규모는 남부 61%, 중서부 19%, 서부 14%, 북동부 6%로 집계

〈리쇼어링 지역별 일자리 수〉

지역	일자리 수	비중
남부	142,828개	61%
중서부	44,453개	19%
서부	32,585개	14%
북동부	14,421개	6%

[자료: Reshoring Initiative]

□ 제조업 투자 확대에도 숙련 인력 부족 및 정책 불확실성은 주요 제약 요인

• Reshoring Initiative는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비용과 숙련 인력 부족을 리쇼어링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

- 미국 제조업 생산비용은 경쟁국 대비 약 10~50%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공장 건설·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 어려워 일부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존재

- 자동화 및 생산성 개선, 기술교육 확대 등 제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 필요

• '26년 National Reshoring Survey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확인

- 설문 응답 기업 249사 중 57%는 정책 불확실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

3. 한국 관련 동향

□ 한국, '25년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FDI 일자리 발표 규모 24,521개로 국가별 1위 기록

• 한국 기업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 대미 투자가 1위의 이유로 분석

- 한국은 전체 일자리 발표 규모의 약 23%를 차지했으며, 중국·멕시코·일본 등이 뒤를 이음

- 한국의 리쇼어링 사례당 평균 일자리 수는 629개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

〈'25년 리쇼어링 일자리 수 순위〉

순위	국가	일자리 수	비중	투자 갯수
1	한국	24,521개	23%	39
2	중국	11,260개	11%	50
3	멕시코	10,368개	10%	15
4	일본	9,269개	9%	62
5	캐나다	7,327개	7%	57
6	독일	7,275개	7%	74
7	스위스	5,501개	5%	26
8	대만	5,150개	5%	27

* 집계 기준: 각 국가 발표 자료를 종합한 Reshoring Initiative 마스터 데이터

[자료: Reshoring Initiative]

4. 시사점

□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단기적인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 중장기적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개

- **미국 제조업 투자는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생산 역량 확충 방향으로 전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주요 시장 인접 생산을 위한 기업의 투자전략 변화 지속

  -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뿐 아니라 운송장비, 기계 및 관련 부품 산업으로 생산기반 확충 범위 확대

□ 미국 내 생산 확대의 지속 가능성은 비용 경쟁력과 생산 역량 확보에 좌우될 전망

- **관세 및 정부 지원에 따른 투자 유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제조원가와 인력 부족은 미국 제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동화·스마트 기술 도입과 숙련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현지 제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

  -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있어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 확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Reshoring Initiative(10.23)

미국 경제통상 동향

(경제) 美 10월 근원 소비자물가 예상 상회, 12월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유지

- **美 노동통계국(BLS)은 11.10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 전월 대비 0.4%, 근원(식품·에너지 제외) CPI는 0.3% 상승(계절조정 기준)**

- 블룸버그,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 했다고 평가했으며, 8월 이후 3개월 연속 0.3% 상승한 것으로 분석

- 블룸버그 집계 기준 근원 CPI는 3개월 연율 3.7%, 6개월 연율 2.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미발표*)

* 2025년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BLS가 당월 가격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전년 동기 대비 비교 불가

- **식품(0.5%)·에너지(0.7%)·서비스 부문 전반에서 가격 상승**

- 식품, 에너지: △식료품 0.4% △휘발유 1.0% △전기 0.9% 등

- 서비스: △주택소유자 귀속임대료(OER) 0.3% △오락 0.8% △항공운임 0.4%

- 상품: △근원 상품 0.2% △가정용 가구·용품 0.7% △가전 1.3% △완구 1.8% 등

- 블룸버그: 이란 전쟁, 관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을 올해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분석

-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

- 이번 CPI는 12.8~9일 FOMC 이전 발표되는 마지막 소비자물가 지표로,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가 확대

- 월러 연준 이사는 발표 전 근원 CPI가 0.3% 이상 상승 할 경우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

▪ 자료원 | 블룸버그(11.10), 노동통계국(BLS) 10월 CPI 보도자료(11.10)

(수출통제) 美 상무부, '블랙리스트 기업 자회사 대상 수출통제' 시행 유예 연장

• **(개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 시행 유예를 '27년 1.10까지 재연장하는 최종 규칙 발표**(11.5)

- '25년 9월, 상무부는 기존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계열사 규칙'을 발표했으나, 1차 유예에 이어 재연장*

* 규칙 발표('25.9.29) → **1차 유예 1년**('25.11.10~'26.11.9) → **2차 유예 2개월**('26.11.9~'27.1.10)

• **(상세) 기존 블랙리스트 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규제로, 이번 조치는 내용 변경 없이 유예 기한만 연장**

- **(적용 대상)** ▸블랙리스트(Entity List) ▸군사 최종 사용자 목록(MEU List) ▸제재 당사자(SDN) 기업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 미국 내 계열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당 자회사가 BIS에 신청 시 적용 제외 가능

- **(허가 요건)** 해당 자회사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을 수출·재수출하거나 해당국 내에서 이전하려면, 모기업과 동일하게 사전 허가가 필요

• **(현지 반응) 미·중 관계 안정 조치라는 평가 속 기업 불확실성 지속 우려 제기**

- 현지 언론은 동 조치가 對중 무역조치 유예의 연장선으로,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관계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분석

* 중국도 같은 날(11.9)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27.1.10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유예로, 향후 재연장·만료·수정 여부가 차기 미·중 협상 결과에 달려 있어 기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

※ (기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부문 지배력에 대응한 301조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의 유예도 '27년 1. 9까지 2개월 추가 연장**(11.9)

* 중국 연관 선박에 순톤당 18~50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2028년 최대 순톤당 140달러), 외국 건조 자동차운반선에 순톤당 46달러를 입항 항차별로 연 5회까지 부과

▪ 자료원 | 연방관보(11.9), 인사이드(11.6), 폴리티코(11.5), USTR(11.9)

(통관) 美 관세국경보호청, 외국 수입신고인 통관 요건 강화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외국 수입신고인(IOR)의 통관 요건을 강화하는 잠정 최종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11.6)**

- 수입물품 가격의 축소 신고와 관세 납부 회피를 막고, 수입신고인의 관세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E.O. 14411, '26.6.3.)의 후속 조치

- 새 규칙은 '27.1.5.부터 시행되며, 외국 IOR에 대한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CTPAT)* 요건은 정식 수입신고와 CBP 지정 양식 제출이 필요한 간이 수입신고에 적용

*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CTPAT): CBP가 참여 기업의 공급망 보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

• **CBP는 미국 IOR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국 IOR의 수입신고 요건을 강화**

- 개인의 미국 IOR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미국 IOR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인·법인은 외국 IOR로 분류

※ 수입신고서와 신고 요약서에 항목을 신설해, 미국 IOR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함

- 기존에는 면허만으로 외국 IOR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새 규칙상 CTPAT 미검증 고객의 신고를 대행하는 통관사는 면허에 더해 자체 CTPAT 검증도 필요**

〈외국 수입신고인 통관 관련 주요 변경사항〉

구분	시행 전 기준·절차	시행 후 기준·절차
법인의 미국 IOR 자격	6월 행정명령에서 실질소유자의 법인 지배 또는 미국 내 상당 규모의 부동산 보유를 기준으로 제시	① 실질소유자의 51%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며 법인을 지배하거나 ② 권리 제한 없는 미국 내 부동산을 상당 규모로 직접 소유
외국 고객의 수입신고	면허 보유 통관사가 신고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자신을 IOR로 기재해 신고 가능	미검증 외국 IOR의 신고를 대행하거나 외국 고객을 대신해 직접 IOR가 되는 통관사는 자체 CTPAT 검증 필요
고객 자격 확인·기록 보관	통관 업무 관련 거래·서신 등의 기록을 보관	고객을 미국 IOR로 신고하기 전 자격 증빙 검토, 확인일로부터 5년간 관련 기록 보관

[자료: 백악관, 연방관보]

▪ 자료원 | 연방관보(11.6), Sandler, Travis & Rosenberg(11.5)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 특이 동향 없음.

* 11월 10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WITA	11/16(월) 2:00 pm	〈USMCA Review and Renegotiation: Views from Mexico and Canada〉 ▪ 전직 통상협상가들과 함께하는 USMCA 검토 및 양자 협상 쟁점 논의	링크
Brookings	11/16(월) 6:30 pm	〈Deterrence in the Pacific: A conversation with Admiral Paparo〉 ▪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하는 역내 안보 및 정책 방향 논의	링크
CSIS	11/16(월) 10:00 am	〈Dynamics in U.S.-Japan Semiconductor Partnership For National Security〉 ▪ 미·일 신뢰 기반 반도체 공급망 안보와 기술협력 확대 바안 및 혁신 생태계 논의	링크
Brookings	11/19(목) 2:00 pm	〈AI and energy costs: Market and policy solutions〉 ▪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장·정책 해법 논의	링크

* 11월 10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Parents Suing Schools Because Their Kids Got Bad Grades (성적표 평가부터 AI 사용 의혹까지, 학교 상대 소송에 나선 학부모들)
	미국 교사 10명 중 4명이 학부모의 성적 변경 압박을 경험했으며, 팰로앨토에서는 성적표 평가와 과제의 AI 사용 의혹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The Washington Post	Mississippi Senate ballot deadline looms, as Democrat's lead remains steady (美 미시시피주 상원 선거 접전, 민주당 후보 약 2,600표 앞서)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9일 비공식 집계에서 공화당 현역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2,574표 앞선 가운데, 10일 잠정투표 개표와 우편투표 접수가 마감되고 13일까지 카운티별 개표 결과가 확정될 예정
The New York Times	U.S. Homeless Population Had Record Drop in 2025 (2025년 미국 노숙인 6% 넘게 줄어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
	미국 노숙인 수는 2025년 4만7,000명 넘게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경 단속의 성과로, 노숙인 지원단체는 기존 주거 지원 정책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AP News	Democrats plan to push clean energy to lower bills and challenge Trump's fossil fuel agenda (에너지 요금 낮추려는 민주당, 청정에너지 확대 추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 내에서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입법에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ABC News	Trump says chief of staff Susie Wiles out, Stephen Miller will replace her (스티븐 밀러, 수지 와일스 후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퇴임을 발표했으며,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해 온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9일 후임으로 취임할 예정

* 미국 동부 시간 11월 10일 14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35	美 해외투자 규제 확대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11월
US26-34	미국 FCC「Covered List」기반 수입 규제 확대 동향에 따른 시사점	2026.10월
US26-33	美 밀워키 G20 무역장관회의 주요 논의 및 현지 동향	2026.10월
US26-32	美 데이터센터 산업·인프라 및 정책 동향	2026.10월
US26-31	캐나다 대응 관세 발효 및 美 338조 수입금지 조치 주요 내용	2026.10월
US26-30	드론 정책 사례로 본 미국의 통합적 안보통상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9월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